

日 오염수·양평고속도로·인사청문회... 7월국회 '전운'

오늘부터 임시국회 개최

민주, 오염수 청문회·국조 요구
김여사 일가 특혜의혹 국조 검토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 자격 검증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의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국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폭염 속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8월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수위는 최고조로 치달고 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충돌이 이어질 걸로 보인다.

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 계류 법안 처리와 청문회 개최를 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갈등은 특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내놓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염수 청문회'도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밀어붙여 청문회 관련 기존 합의를 먼저 파기했고 과당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감사

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회 소집일인 10일에는 안민석 의원 등을 주축으로 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대의 여론전에 나선다.

민주당의 김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반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을 놓고도 여야 비난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유포로 주민 숙원 사업이 중단됐으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2년 전 해당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는 점과 함께 이해찬 전 대표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입지 의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양평 땅 의혹까지 꺼내 들며 역공에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업 백지화' 방침에 대한 지역 주민들 반발과 내년 총선 악재 우려 등을 감안해 민주당이 사과할 경우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필요시 국정조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원안 추진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21일로 예정된 김영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은 이미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다. '김정은 정권 타도' 등의 주장을 펴온 김 후보자가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지닌 만큼 통일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부적격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버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과도하게 편향된 정치공세'로

보고 적극 엄호 태세다. 김 후보자 과거 발언들이 '안보 우선' 주장이라는 점에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종료일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까지 국회를 열어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만큼 '필요 최소한'으로 일정을 잡고 21일 정도로 회기를 종료, 공백기를 두겠다고 맞서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이낙연 무슨 얘기 나눌까

민주, 이번주 만찬 형식 검토...이 전대표, 혁신 작업 등 고언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주에 만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회동 일시와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두 사람이 이번 주 만난다"고 밝혔고, 이 전 대표 측 인사도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금주 내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회동 형식은 배석자를 두고 만찬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이 지지부진한 당 지지를, 비명(비이재명)계의 리더십 공격 등 불안감이 견디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을 돌파구로 삼기 위해 일정을 당기려 한다는 이야기도 당내에서는 나왔다.

무엇보다 두 사람간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관심사다.

이번 만남이 진명계와 비명계간 계파 갈등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 수도, 오히려 비명계 결집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서다.

일단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과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한 이 전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 귀국 이틀날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사국이라서 모두가 힘을 함께 합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생각보다 빨리 '이재명 체제'에 쓴소리를 해온 만큼 이 대표와 자리에서도 당내 민주주의나 혁신 작업 등에 대해 고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이런 때 제가 몸담은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고 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양평고속도로 원안대로"

민주 "원희룡, 백지화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여론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사업 변경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도 제차 제기하며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건희 라인으로의 느닷없는 노선 변경도, 생뚱맞은 전면 백지화 선언도 모두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남 탓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후안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당장 멈추라"면서 "원 장관은 국책사업을 엮어버린 장본인으로 국민께 사죄하고 사임하라"고 쏘아붙였다.

/연합뉴스

김홍걸, 민주당 복당

당무위서 의결... 2020년 재산신고 누락으로 제명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 의원의 복당을 의결하기 위한 당무위를 열었으나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한 추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류한 바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김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이던 2019년에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당무위 후 기자회견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한 결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불만 한 정황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민화협의 부실한 사업 관리가 이 사건의 원

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해 10월 전라남도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을 통지한 후 이 보조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이자 민화협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의 진술 외에 (의혹과 관련한) 다른 분의 진술은 받지 못한 한계는 있다"고 언급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의 복당은 지난 4월 최고위에서 의결됐으나,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 처분을 받은 터라 복당이 확정되려면 당무위 최종 의결을 거쳐야 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